

與野 추석 민심 동상이몽... 정쟁보다 민생 vs 국민분노 외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 챙기기’ 행보 집중강조
“정쟁보다 선의의 경쟁 우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 장관 자녀 특혜 의혹 특검 요구
“반드시 제대로 된 결론 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여야 정치권이 바라본 추석 민심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분노’를 각각 추석 민심 키워드로 꼽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대하는 여야 정치권 태도가 다른 셈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석 이후 ‘민생 챙기기’ 행보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국민께서 이구동성으로 정치권에 하신 말씀은 일해라였다. 간신히 간판만 유지하고 있던 골목 상인들의 하소연은 정치권이 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해 달라라는 것이었다”며 민생정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여야의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요구하

고 계신다. 4차 추경, 가족돌봄휴가연장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합의 처리했던 성과를 이어받아서 민생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여·야·정 상설국정협업체 가동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 등을 야당에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라며 “국란 극복, 민생, 미래 전환, 평화를 4대 의제로 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정감사 이후 민생, 미래, 개혁을 위한 3대 입법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총총한 민생경제 안 전망 구축 ▲한국판 뉴딜 제도적 기반 마련 ▲권력기관 개혁 입법 완수 등을 내세웠다.

민생경제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시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과 지역경제·민생경제 활성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 뉴딜 입법 추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과 경찰법 및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 등 권

력기관 개혁 과제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반발로 이뤄지지 않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도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석 민심에 대해 전했다. 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들끓는 분노를 전해 들었을 것”이라며 추미에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해양수산물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 언급한 뒤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자녀 군

(軍)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추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인 만큼 검찰 지휘체계를 활용해 사건 무마에 나설 것이라는 의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지휘체계 벗어난 특별검사가 나서야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본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건에 객관적 정보와 다르게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본인이 내리다시피 한 결론을 갖고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라며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결론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롯한 경제 실패, 탈원전·태양광 비리,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굴종적 대북관계 등 모든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국민께 보고하는 국감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에 더해진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거의 바닥이 난 나라 곳간 문제도 철저히 짚겠다”며 향후 대책 마련 검증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휴업에도 새희망자금? 구멍난 지급대상 관리

조건 미해당자도 1차 대상 선정 문자 환수 절차 관련 안내 부족... 혼란가중



지난달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새희망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년간 휴업인 사업자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허술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환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확한 환수 절차 등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새희망자금 1차 대상에 선정됐다는 문자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발송 후 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따라서 휴·폐업 상태로 2020년도 매출이 0원인 소상공인들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또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한 소상공인들도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청 문자가 오는 것은 물론 신청 시 2~3일 내로 새희망자금이 지급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3년 전 미용실 휴업 후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박 모씨는 “가게를 휴업한 지 한참이 지나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신청 문자가 와 당황했다”며 “오히려 지급 장사를 하는 남편에게는 신청 문자가 오지 않아 이게 뭐지 싶더라”고 토로했다.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안내 문자를

통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은 초조하게 환수를 기다리고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온라인의 류 소포몰을 운영하는 김 씨는 “전업이 아니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다”며 “신청 후 금방 자금을 받았지만 찝찝한 마음에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자기들도 잘 모른다며 매뉴얼에 적혀진 대로만 말하더라”며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처럼 새희망자금의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무리 없이 신청 자금을 받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확한 지급 기준 및 환수 절차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운 교수는 “정부 재원을 이용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세원과 관련된 재원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고 혼란없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0248@

국방비 인상에도 체감할 수 없는 軍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나19 방역, 태풍 및 호우피해 대민지원 등 국내활동은 많았지만 정당화 대우를 해줬는지 묻고 싶다.

현역 군인은 언젠가 민간인 또는 예비역으로 생을 전환하게 된다. 사람에게 대한 충분한 인적지원과 대우보다 제대로 쓰이지 못할 무기와 장비가 먼저라면 전역자들은 절대 군과 정부를 응원하지 않을 것이다.

무기와 장비도 중요하지만, 기계가 100% 사람을 대신해 피를 흘리는 시대가 오지 않는 한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올바른 도덕관과 전투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보급 계획이 취소된 K11 복합소총이지만, 군은 이를 상정하고 보병분대 편제를 8명으로 줄였다. 최하급 전투단위에 화력과 생존력을 강화해 편제를 줄였던 것인데, 말단 전투제대의 화력은 크게 개선된바 없다.

개인휴대 소총의 성능개선을 필요한 레일시스템과 이에 수반된 광학장비 등은 특전사를 비롯한 정예부대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비웃음을 산 미래보병계획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미국이 버린 ‘랜드워리어’ 개념을 가져다 만든 이 계획은 정작 실현하겠다는 2020년이 3분의2가 흐른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더 실성 없는 계획으로 2026년 실현하겠다고 한다.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쓰고도 장비들은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일까. 당장의 짝퉁 칼, 짝퉁 헬멧, 짝퉁 방탄복도 이미 충분히 힘든데 말이다. /captin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민들의 가계는 힘들어져도 국방예산은 꾸준히 올랐다. 국방예산이 올랐다고 우리 군의 전투의지가 고양됐다고 말하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그 많은 국방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체감하기 힘들다는 게 일선 군인들의 반응이다.

지난달 3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5.5%가 인상된 52조9174억 원이었다. 지난해 국방부가 올린 예산안은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전쟁의 중심에서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는 통일부장관이나, 북한해군의 공무원 총살 및 시신유기에도 종전을 향해 길을 걷자는 정부의 기조와도 달라 보인다. 무엇이 자주국방이고 평화를 위한 길인지 혼란스런 시대다.

고가의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인력은 지금도 부족한데, 항공모함, 핵잠수함, 기동헬기, 개인 전투장비 등의 플랫폼 도입 및 구매,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액되고 있다. 반면,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줄었다. 경제적으로 징집된 병의 급여는 크게 올랐지만 기본사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외파병을 비롯한 군의 국외활동과 평창 동계올림픽, 코로

美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방한 일정 연기

트럼프 대통령 확진판정에 계획 수정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7~8일 예정한 한국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예정한 아시아 방문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 도쿄를 4~6일 방문할 것”이라며 “도쿄에서 예정한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10월에 다시 아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일정을 다시 잡기

위해 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한국 방문 계획 취소 사실을 외교부에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4일 폼페이오 장관 방한 일정 취소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연기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 다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